

사회적 신뢰문화가 지역발전의 밑천

김 용 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사회적 신뢰수준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뢰는 공자와 맹자 시대부터 2000년도 넘게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등 인간관계의 기본인 오상(五常)의 덕(德)으로 존중되어 왔다. 신뢰가 없으면 가족과 직장, 그리고 나아가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어렵다.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마저도 경제적 효율의 원동력으로 인정해 온 ‘아담 스미스’도 신뢰를 건전한 시장경제체제 형성의 기초로 보았다.

시장 참여자간의 신뢰 없이는 부(富)를 창출하는 분업과 교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첨단기술과 지식정보시대에 경제주체 간 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신뢰는 산업화시대의 도로, 철도, 항만, 용수 및 산업단지 등 생산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자본’이라고도 한다.

최근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부동산, 금융 및 노동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보다도 경제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자본수준은 경제와 산업발전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향상과 교육·보건과 같은 정부정책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결국 기술과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사회적 신뢰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전력하고 있다.

바로 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인 미국의 실리콘 벨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실리콘 벨리는 첨단기술과 정보의 거점인 명문 대학과 다국적 기업 입지 외에도 전문성을 지닌 경제주체들이 상호간 정보, 지식과 기술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신뢰기반과 협력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모델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성장의 신화를 창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수준은 OECD 국가 중 22위에 불과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46점(100점 기준)으로 나온 조사결과도 있다. 또한 국민들의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등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취약한 사회적 신뢰기반을 방치하고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신뢰 형성은 그 당위성만을 강조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 사회단위의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사회 구성원의 신뢰문화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및 행태가 변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발전이 불가능함을 인식하면서 신뢰문화형성이 현 세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임을 받아들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거래와 사회적 영역에 있어 신뢰를 최상의 가치로 하는 교육, 홍보 및 시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언론, 학계, 기업,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선도적 역량과 리더십 발휘가 필수적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문화 형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능동적인 지원과 노력 없이는 체계적인 사회적 신뢰문화 형성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능분야별 신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자율적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신뢰문화를 정착하여 일상화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한 자율적인 신뢰관행과 규범의 확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례로 충남은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 도청신도시, 세종시 등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와 기업유치 및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내 신뢰기반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신뢰문화의 형성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과 제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와 인프라 확충에만 의존하는 지역발전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뢰문화 형성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